



“어촌어항을 살리자”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집중적인 투자 필요”

우리나라 1차산업을 이끌어 온 두 가지 축은 두 말할 나위없이 농업과 수산업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분야의 격렬한 반발을 보면 그 편린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980년 13만4천여 가구에 달했던 어가수가 2004년엔 7만2천5백여 가구로 46%나 감소했으며, 어가인구는 72만5천여명에서 21만명으로 무려 71%나 크게 감소했다. 어업종사가구원은 29만5천여명에서 12만2천여명으로 절반이하로 폭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어가소득이 농가소득과 비교하여 86%, 도시가구 소득과는 68%에 불과한 현실이 이렇게 수산업을 우리 경제 지표에서 잊혀져 가는 사양산업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우리의 수산업은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산업이 되고 말았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체 산업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국민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식량산업과 어촌 어항의 꿈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는 사실이다. 이런 논리라면 세계 경제 일등국으로 굳건히 올라선 가까운 일본의 수산업이나 어촌 어항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수산업 조직을 강화하고 어촌 어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이 이에 대한 연구 노력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어촌 어항과 관련한 수산업 대책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커다란 공로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논리에 밀려 언제부터든 국민적 관심사에서 서서히 외면 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바다가 우리나라 삼면을 둘러싸고 있다는 지형학적 우수성과 장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식량자원의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촌 어항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최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관심에 부응하여 어촌 어항이 단순한 수산업의 생산기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휴양시설로서, 또는 해양문화 관광단지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수입이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되면 젊은이들이 굳이 어촌 어항을 떠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이유를 근거로 어촌 어항에 대한 관심을 지금과 다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촌 어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및 개발계획과 예산이 오히려 집중 투자될 필요가 있다.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는 기본이고 여기에 뒤따르는 환경 복지는 물론 21세기 미래산업으로서의 수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촌 어항은 국민 모두의 고향이다.

수산업이 현재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를 과소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산업이 결코 아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잠재된 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이를 실천에 옮긴 지 오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탄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 평 압